

풀뿌리민주주의와 공공성: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

초록

이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세상 학문이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신학이 제시하는 인간관과 윤리 철학이 세상 학문의 딜레마를 풀어주는 답(solution)이 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성만으로는 세상의 다원성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풀어내는데 신학 즉 공공신학은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과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그 중에 다원성, 법치, 왕정에 대한 견제, 평등, 자유, 정의, 지방자치, 인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스 아테네를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근현대 사회에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설계한 것은 1861년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에 대한 구상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체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었는데, 20세기 인류의 경험을 통하여 이 역시 엘리트화와 전체주의로 빠져들어갔던 반성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로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대의정부의 보완재로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헌법에서 민주공화정과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이 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설계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주권자인 주민들이 근린자치와 지역자치 혹은 권역자치에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이 21세기 인류문화에 선도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린자치제도 속에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한국도 도시화되고 시민의 90%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어, 공동체가 사라진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역할을 근린자치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조직이 교회공동체 조직이다. 교회공동체는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의 개혁만이 아니라, 도시정부와 국가 정치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과 봉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쳤다.

한국 교회는 교회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영성과 신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한 때 큰 부흥이 있었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참여에는 무관심하고 소극적이었다.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의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조와 행태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회공동체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치(self-rule)와 민주주의 개혁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교회내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세상 나라에서 실천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민주주의로 법제는 되어 있지만, 법을 이용한 반민주적 행태와 엘리트들의 반민주적 인식이 독초처럼 돌아나기도 하고 있다. 이에 교회공동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관용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적극적인 공민(public civilian)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공신학에 새롭게 제시하는 공공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방향성이다.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공동체, 능동적을 세상 나라의 리더로서 교회 직분자들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률적 공간일 수 있다. 이 공간을 더 이상 행정관리의 통제하에 예측되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기반위에서 시민사회의 공동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곳을 통하여 교회공동체에서 함양되었던 거듭난 성도들의 자치(self-governance)를 실천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공공신학, 칼뱅, 개혁신학

I 문제제기 : 폴뿌리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한계

한국은 헌법적 가치로서 ‘민주공화정’을 선언하고 있고,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는 민주주의국가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권자이다. 그러면서도 공화정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공화정의 핵심가치인 법치에 의하여 국가공동체가 다스려지는 것으로서 입법을 누가하는가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민주공화정을 위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국정차원에서 국회를 선거로 구성하고, 지역구와 비례선거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진다. 또 지방자치차원에서도 지방의회를 선거로 선출하여 주권자인 주민들의 대의자들에 의하여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운영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방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기획과 관리에 의한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시스템은 존 스튜어트 밀(J.S.Mill)이 기획한 대로 정부가 운영된다면, 주권자인 시민들도 시민성이 개발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권자들이 선거할 때만 참여하고, 그 나머지는 무관심하다든지, 대의자들의 토론과 숙의 과정에 의하여 학습되지 않기에, 대의자들이 또 다른 귀족, 즉 엘리트화되어 과두정이나 심지어 독재정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세기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의자들이 독재정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 정부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이 제시되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의자들에게 맡겨두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부운영의 부패와 독단적 이권행위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페이트만(Pateman)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통해, 불평등, 차별,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이것은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적인 개인을 넘어서 공적인 시민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는 일터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권위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하고, 민주적 정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참여사회라고 주장하였다. 권위구조의 민주화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은, 이를 통해서만,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읍면동 단위 삶의 구역을 보면, 주권자인 주민들이 근린생활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 시군구와 광역시도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어,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35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는 임명직인 읍면동장이 주민센터의 행정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소비자가 되어 수동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읍면동 단위의 구역에는 주권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자체가 부재하다.

지방자치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2026년 3월31일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읍면동 지역의 민주주의와 공공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는 문화적 토양이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읍면동 시민사회에 시민성에 기반한 공공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방자치의 전공자로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페이트만이 말하는 참여는 공동체단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는데, 한국의 읍면동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한 듀이(Dewey)는 민주적 공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공동체(the great community)로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다수결과 같은 결정 규칙보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대화와 토론, 설득의 과정이 존재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한국의 읍면동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이 들어설 공간(agora)이 부재한 것이다. 이 문제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읍면동 공간에서의 민주적 공중을 과연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오고 있는 공공신학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공공신학의 방향성과 근린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공공신학의 방향성

공공신학은 논의의 장을 시민사회로 둔다(성석환, 2019:33). 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민사회의 관점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교회안에 가두어두려는 교회론적 윤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한다(전계서, 33). 이 점에서 공공신학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종교에 대한 양쪽의 이해가 필요한 셈이다.

또 공공신학은 지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데 있어, 세상 학문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시민사회 속에서 종교의 역동성에 대한 고려가 놓을 자리가 있을 것이라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시민사회는 사회적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성립된 것인데, 이 시민사회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이(difference)와 교양(sophistication)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기독교가 공적영역에서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기독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절대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종교의 비평적 역할은 공적영역인 시민사회에서 공공신학을 수립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다¹⁾.

또 공공신학의 실천의 방향성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증진하고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해방신학이나 정치신학과 같은 급진적 방법보다는 시민 운동에 참여하거나, 평신도의 생활윤리를 성숙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스콧패스, 2008:40)

자발적 참여나 민주적 의견의 개진이 쉽지 않은 사회에서는 시민성이 미성숙하기에, 갈등 당사자들의 충돌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신학의 지역화를 주도하는 존드 그루시는 공공신학의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공공신학은 단지 교회의 공적 선언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문제삼는 ‘신학하기(doing theology)’의 한 양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존드 그루시, 2008:7-8).

공공신학은 결국 공동의 유익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신학은 어느 한 방향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복합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삶의 통전성(integrity of life)을 증진시키는 책임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윌리엄 슈바이크, 2010:24-25). 이 문제는 다시 기독교적 정체성과 규범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질문과 관련이 되어진다. 즉 기독교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과 공동체의 규범을 구축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통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성석환, 2022:37)

1) Robert Wuthnow, Christianity and Civil Society: the contemporary debate(Valley Forge: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p91-97. 『기독교와 시민사회』 (기독교문서선교회 역간)

2 근린공동체에서의 공공성 요구

서구에서 형성된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시민을 주체로 삼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과 같은 특정집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공존하였다. 그랬기에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유사 가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종교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진정한 형성을 방해하였다고 한다(성석환, 76). 한국의 종교가 국가에 고분고분 시종드는 역할을 맡아오면서, 종교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거나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박영신, 2010:133).

특히 현대도시는 산업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적 이익사회가 되어버렸다. 도시적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구성원들의 지역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제들을 민감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교회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도시에 존재하는 부정의와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자체도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건물도 구입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조직이 되었지만, 정작 교회 공동체는 그 운영에서 매우 보수적이게 되고,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 성도 상호간에도 파편화되어, 상호 불신과 상호 경쟁 속에 낙오된 개인들은 소외되고, 배제되기도 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교회의 이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교회재산과 교회의 조직권력을 사유화하고, 심지어 세습하고 과점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는 교회재정의 불투명성과 특정소수에 의한 교회권력의 과점화로 인한 범죄와 악의 침투로 교회 리더십이 무너지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은커녕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

는 폐쇄성과 부패로 질책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강하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 성도들도 독재정의 우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회공동체는 근린(neighborhood) 시민사회에 속해 있다. 교회공동체가 작은 규모일 때는 설립자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의 수가 250명을 넘고 500명이상의 규모가 되면, 근린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공공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그 운영방식이 설립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조직운영은 구성원인 성도들의 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운영자체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유지되고, 그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대표없는 곳에 세금없다는 명언처럼, 교회공동체의 운영도 성도들의 대표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의제 방식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의자들은 성도들의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선거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리더들을 성도들이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선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설립자나 교역자들의 추천이 곧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과두정이나 전제정에서나 나타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성도들이 총회에서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선출된 대의자들은 장로로서 당회를 구성하여 선거로 선출된 목회자와 교회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운영에 도입된 장로회 제도의 의사결정방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회공동체에서 개혁신학에 의하여 전통으로 정립된 장로회 즉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교회운영은 근린 지역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에도 적용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상 나라에서도 지연 공동체나 지구(district) 공공체가 지역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공론장을 통하여 숙의가 이루어진 후에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 총회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집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논의를 미리 거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의자로서의 전문적 검토를 하는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들로서 이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종합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도 민주적 운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예표적 운영이 바로 개혁신앙에 입각한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서 경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평등한 백성으로서 민주적 자치(democratic self-government) 운영이 요구되듯이, 세상 나라에서도 세상 문제를 이성적 입각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자치가 요구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나 세상 나라에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적 자치는 공공성을 가지는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3 교회 공동체와 공공신학: 근린자치와 지방자치의 제도설계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민사회의 다원적 공공 영역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것은 예술이나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개개인의 삶에 대한 주체적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참여적 개인역량 개발이 되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문화시민사회가 된다는 것이 단지 공연을 즐기고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지역의 관계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성석환, 85).

교회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문화적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민 인문학모임을 만들거나, 마을기업을 공동운영하는 것, 지역개발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 지역사회의 도서관운영과 같은 문화서비스를 자치와 참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품격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후기 세속사회에서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재구성을 통하여, 공동선을 고양시키는 것이 공공신학의 역할이다.

종교개혁가들은 도시를 무대로 하여 개혁의 영성을 이어갔다. 개인으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훈련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그 도시 공동체안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했다. 칼뱅도 1541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복귀하여, 교회와 시의회에서 활약하면서 제네바의 개혁을 주도한 것이다.

법령을 제정하고 규칙과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속사회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허례를 걷어내는 일은 제네바의 사회개혁과 동일한 시간표로 진행된 것이다(성석환, 2022:301)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고, 도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세상에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가진 위험과 기회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칼뱅은 1541년 제네바로 돌아와서, 두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정비를 주도하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다(성석환, 2022:305). 제네바 도시는 교회와 국가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교회론적 안정이 필요하였고, 공화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인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헌법적 구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Naphy, 2011:102).

칼뱅의 경우 교회의 일과 세속 사회의 공적 업무에 양쪽 모두 열심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세속 사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칼뱅의 기독교강요에서는 교회가 세속권력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정리해 두었는데, 여기서 교회는 정치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는 부자와 세력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지켜 주도록 국가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교회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참된 종교를 향상시키고 교회의 치리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여, 교회 자체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정정치(theocracy)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두 권력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프레드 그레함, 1995:84-87).

또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잘못했을 때, 이들을 경고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칼뱅은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는 것과 두 주체는 서로 구분되어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칼뱅의 교회관이 어떠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칼뱅은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독립적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간의 존경과 도움을 주어서 동일한 백성을 도와주고 지배함으로써, 나란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속 법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를 피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국가도 교회의 영적 훈련을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속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는 그리스도교인 개개인들에게 영향을 행

사하는 영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국가를 위한 한 교회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²⁾. 오토베버는 중세 신정정치의 문제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교황의 권세와 황제의 권세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즉 황제의 권세가 커지면서, 국가가 교회의 일까지 간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다(오토베버, 1995:84-88).

요컨대 21세기 한국교회가 칼뱅이 가졌던 세속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이어받는다 고 한다면, 세속사회에 민주주의가 성숙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자치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과 제도설계를 하는데 참여하고 낙후된 근린사회의 공공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었고, 세속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방향으로 신학적 입장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신학 이데올로기에 너무 엄격하여 반대자들과 경쟁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서, 근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신학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적 유연성을 가지고 세속 사회의 낙후된 공공성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속사회가 민주공화정으로 성숙하도록 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III 공공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린지역자치제도설계에 대한 제언

1 교회공동체의 공공성

교회공동체가 공공성을 가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공동체가 속해 있는 시민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는 정부영역의 공공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 구성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공화정의 이상을 지향해가도록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는 주권자인 주민과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주민과 시민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정부의 대의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자들에게 경고

2)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조직화하고, 국회 조찬기도회를 운영하여, 대통령과 정치가들에게 권력적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행태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 오히려, 교회는 그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와 압력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사회구성체로서의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단위요소 중의 하나이다. 교회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또 교회공동체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총회를 구성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며, 총회를 통하여 교회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선출하고, 교회공동체를 위한 목회자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도 한다.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신칭의나 구원예정설 등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전환을 가져온 이론이었지만, 교회공동체의 운영을 장로회를 통하여 운영한다든지, 공동의 회를 통하여 총회제라고 하는 폴뿌리 민주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개혁하였다는 것은 기독교가 세속사회에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문화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개혁의 진전에 따라서 교회공동체의 의사결정방식이 대의제만이 아니라, 감독제나 회중제로 다른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공동체의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운영의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교회법에 의하여 교회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공화정과 민주정의 의사결정시스템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세속사회를 앞서 나간 놀라운 문화 개혁이었다.

그런데, 한국에 도입된 개신교는 개인구원과 개인영성을 강조하는 경로를 밟아와서, 세속사회에서의 문화변혁과 민주공화정의 성숙을 위한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의 경제적 번영이 달성되면서, 교회는 건물을 짓고, 교회 재산을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세습하는 재벌 기업경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개척되어, 재정적으로 어렵고 목회자들의 교회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 교회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개척목회자의 교회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회운영의 정체(politeia)가 독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교회운영의 비리와 교회재정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문제삼고 비판하는 장로그룹이나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세속사회는 87년의 민주화와 헌법질서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일부 대형 혹은 중소형의 교회공동체에서는 여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전횡과 세습, 교회재산의 사유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규모가 되면 교회공동체지만, 공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지연하거나 저항하는 일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세속사회에서의 민주성보다 더 뒤쳐진 교회운영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교회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뒤쳐진 비민주성과 제왕적 교회운영의 폐단을 가지고 있어서는 세상에서도 불신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 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의보다 못하게 되면, 밧혀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민주성과 공화정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다.

2 교회당의 공론장 기능

교회공동체는 내부적인 기능과 외부환경을 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의사결정하고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며, 경험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하며 창의적이며 혁신적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하여 대화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다. 지역교회 공동체는 매주 1번씩 예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들이 대면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찬송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생활, 그리고 내면의 생각과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환대와 공동체의 운영에 관련된 광고를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보를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소식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관심 이슈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이슈와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론장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추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논의하는 다른 지역공동체 혹은 이슈공동체와의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회 공동체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조직교회의 경우는 당회가 있고,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제직회 등의 하위 구성원 모임들이 있고, 이슈별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구제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조직이 있다. 위원회 조직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대표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되어서, 이슈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외부의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이슈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교회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이슈와 관련된 공론장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또 조직교회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외부 자치공동체 혹은 자치공공조직과 지역사회의 자치를 위한 구역자치회를 만들 수 있다. 구역자치회는 각 구성단체의 대표들의 협의체와 같은 성격이므로, 협의체로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그 소속 조직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아서 와야 구역이슈에 대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여야 할 것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구역 지역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체이고 협의체 공론장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구역을 자신의 선거구로 가지고 있으므로, 구역 자치회 즉 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주권자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구역자치회의 협의체 회원들과 소통하게 되면, 이것은 곧 구역자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치공동체나 조직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방의회와 구역자치공동체의 거버넌스, 즉 협치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된다.

공공신학은 교회 공동체가 구역의 공공이슈를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양성해 주는 것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해 주는 학문이다. 이 점에서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방향인 교회 공동체가 공공성을 가지도록 성도들의 책임을 내면적인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공공성을 주도하는 지역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과 인식을 가지게 해 준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이 공공신학에 기대되는 방향성이다.

3 근린자치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제네바시에 설치되었던 컨시스토리(consistory)의 구성과 기능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네바의 목사단과 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기관이었다. 일종의 종교법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로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다르며, 사회적 명망 있는 자들로 채워졌고, 제네바시의 소의회와 대의회에서 파송하였다고 한다(성석환, 2022:307).

컨시스토리의 임무는 종교적 기능만이 아니라 제네바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치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상벌을 과할 수 있었다.

제네바시에서는 입법원이나 정부 관료들도 모두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컨시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컨시스토리가 지역 교회(parish)와 같은 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이다(Naphy, 2011:107).

칼뱅은 교회와 국가를 한 몸의 두 지체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제네바시민 중에서 적절한 돌봄이 없어서 고통받는 개인이 발생한다면, 제네바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결되도록 하고, 각 개인이 하나의 매듭처럼 서로의 이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를 원했다(성석환, 2022:309).

즉 칼뱅은 지역사회를 교회와 한 몸 공동체로 인식하였고, 세속사회의 권위도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도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속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21세기 한국 지역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세속 정부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주민이기도 한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정의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숙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공론장을 만들어서 숙의공론을 하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2026년 3월말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조직이 되었고, 주민자치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민자치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시대를 지나,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던 시대를 거쳐왔다.

그러다가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과정에 특정 정당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도하는 바람에, 다른 정당은 이것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파적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비판하는 바람에, 다른 정당이 단체장이 된 곳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급격하게 중단해버려서, 주

민자치가 마치 정치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는 주민자치가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론적 논거를 찾기 시작하였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형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주권자인 주민들이 행정과정과 정책과정에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공성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렵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 자체가 사라졌고, 형성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스스로 활성화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철학을 가진 리더가 공동체만들기사업과 주민자치와 공동체정책을 융합하는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10여년간의 대도시 서울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시장이 직접 시민사회로 들어가서 현장 공청회 혹은 타운홀미팅을 실시한 것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역권역별로 타운홀미팅을 주관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하자고 주민주권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 사회에는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다른 정당으로 바뀌면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세상사회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교회공동체일 수 있다. 즉 교회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정당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개인 차원에서 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지라도 교회공동체로서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라고 해서 그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권력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윤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지켜 보시면서,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악과 불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잡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오히려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에 기반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교회공동체로서 참여할 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정부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2026년 3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읍면동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 공간을 공론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내어 줄 수 있다. 또 주민 자치회에 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 조직으로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들인 목회자와 장로들은 세상 나라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사들도 교회공동체 내부의 봉사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IV 결론 : 학문간융합을 통한 공공성 교육

폴뿌리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웃과 주민들이 서로 대등하면서도 관용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사역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다. 칼뱅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눔으로서 가능하다고 했다(Pattison, 2006:137).

칼뱅은 개인주의적 영성에 토대를 둔 윤리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키는 윤리였다.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은 시민들이 서로 평등하면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의 윤리를 가질 때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거듭난 크리스천의 윤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것을 관용할 수 있으며, 내가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경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이방인들과의 연대,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연대 등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시민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다(성석환, 2022:312).

행정학과 지방자치학은 법치행정을 가장 이상적인 관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법치는 곧 민주공화정과 주권재민을 표방한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공신학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뜻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곧, 세상 학문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시민성을 길러내기 위한 것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도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고, 자치(self-rule)적 공민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경교육과 삶속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제자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성은 세상 나라의 교육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개인주의화되고, 상호 경쟁이 치열하여 불평등과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공신학적 교육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박영신, “잊혀진 이야기: 시민사회와 시민종교”, 박영신 이승훈 편,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서울: 북코리아, 2010).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스택하우스, 이상훈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오토 베버,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출판사, 1995)
- 존 더 그루시, 김철호 역, 『자유케하는 개혁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프레드 그래함,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Bonnie L.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뽕둔: Pickwick Publications, 2006)
- William Schweiker, “Public Theology and the Cosmopolitan Conscience,”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2010
- William Naphy, “Calvin’s Church in Geneva,” in Irena Buckus and Philip Benedict, eds., *Calvin & His Influence, 1509–200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풀뿌리민주주의와 공공성: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발표자	김찬동
		논찬자 (소속)	고세일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찬동 교수님의 “풀뿌리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논문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의 반대 측면에서 왜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신앙이 국한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레슬리 뉴비긴 지음, 신국원 옮김, 「세상 속 교회의 길을 묻다 - 계몽주의와 현대 문화, 과학주의 세계관을 넘어서」, IVP, 2025). 뉴비긴의 생각도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하는 공공신학과 함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에 이러한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을 목회 현장에 구현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그러한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팀 켈러 지음, 오종향 옮김, 「센터처취」, 두란노, 2016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한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을 2026년 5월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대략 8년 전에 우리 가족은 모잠비크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한국이 선교지 같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전문가분들이나 똑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섬기던 레슬리 뉴비긴이 오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느낌과 같습니다. 뉴비긴도 ‘영국이 인도보다도 더 선교지처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방향성은 이론상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향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 측면이 많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신학’의 방향성과 더불어 ‘실천신학’의 구체성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오랫동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회 변혁을 실천하시고 섬기는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시려는 두 가지 면을 모두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한 교회 공동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려면,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삶에서 흠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태 28:18-19).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임(에클레시아, gatherings)입니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느 곳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말씀을 삶에서 나누는 것이 절실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사회에 다음 세대의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따른 불신감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삶이 통합되지 않고 나누어진 것이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김찬동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한국 사회에 걱정 어린 시선인 듯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분쟁의 숫자도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고세일,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1호, 2023, 7쪽).

김찬동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논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